

이 보도자료는 2024. 7. 19.(금)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검찰청

대변인실 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

2024. 7. 19.(금)

자료문의 : 형사정책담당관실

전화번호 : 02-3480-2922

주책임자 :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

대검찰청 '24년 제2회 '형사법포럼' 개최 - 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, 『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: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』 강연

- 대검찰청은 '24. 7. 19.(금) '24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하여,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·안전·법 연구소 명예소장(前 연구소장) 울리히 지버 교수의 『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: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』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.
 - ※ 울리히 지버 교수는 프라이부르크대, 뷔르츠부르크대, 뮌헨대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·안전·법 연구소장을 역임하고, 현재 명예소장으로 재직 중
 -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11년 설립되어, 산하에 86개의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고, 단일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
- 울리히 지버 교수는 "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, 전통적인 법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, 21세기의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"고 강연하였습니다.
 - 이에 토론자들은 세계화·디지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학계, 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·협력하여 보이스피싱,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범죄와 불법 콘텐츠·가짜뉴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국제 테러리즘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I 행사 개요

● 일시 및 장소

- '24. 7. 19.(금) 14:00~18:00,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

● 참석자

- 교수, 변호사, 법학전문대학원생, 검찰 구성원 등 150여 명

● 프로그램

◆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: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

사회 : 김희균 교수 (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발제 : 율리히 지버 명예소장 (독일 막스플랑크 범죄·안전·법 연구소)

토론 :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(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)

양천수 교수 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이원상 교수 (조선대학교 법학과)

김지은 부부장검사 (법무연수원 교수)

◆ 종합 토론

※ 「형사법포럼」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·토론·논의를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최근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음

- '24. 3. 29. 2024년 제1회 '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'
- '23. 12. 8. 2023년 제4회 '체포·구속제도에 대한 고찰'
- '23. 9. 8. 2023년 제3회 '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'
- '23. 6. 30. 2023년 제2회 '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'
- '23. 3. 31. 2023년 제1회 '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'

- ‘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’해야 하므로, 전통적인 법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
 - 21세기의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라는 새로운 도전들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요구됨
- (세계화) 국제경제범죄,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·기소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협력해야 함
 -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해결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, 유럽연합(EU) 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*유럽검찰청(EPPO) 설립이 그 모델 중 하나임

*유럽검찰청(EPPO) : 유럽연합(EU)에서 '21. 6. 부패·경제·조세·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를 대응하기 위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도록 설립한 검찰청

- (디지털화) 디지털화의 발전은
 - △ 컴퓨터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범죄 (시스템 조작, 해킹 및 파괴),
 - △ 인격권 침해,
 - △ 불법 콘텐츠와 가짜뉴스,
 - △ 인공지능의 특수 효과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야기함
 - 불법 콘텐츠·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조치, 기존 형법 외의 추가적인 법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(위험사회) 세계화, 디지털화를 수반한 국제 테러리즘 등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, 그 예방·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 됨
 - 예방·보안은 <형사법적>으로 유죄 선고 없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와 예비죄의 확장 등으로, <비형사법적>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 행정제재 조치 등으로 각각 현실화되고 있음

<토론자 의견>

- 토론자들은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는 세계화·디지털화·위험사회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데 공감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
- ①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등이 시행하는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
 - ② 독일은 대상물의 불법성만 확인되면 독자적 몰수가 가능하다는 독립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위험사회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
 - ③ 기술발전의 초연결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형법을 포함한 법체계의 중요한 과제임